

“사드 배치 결정 철회에 국회가 나서라”

전국대선회 “동북아 평화·안보 위협”- 민변 “결정 과정 위법성”... 보수단체 “성주군민 항의 지역 이기적 행태”

시민단체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19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결정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선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선회의(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결정 철회에 국회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 주장과 달리 사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고도가 낮아 요격고도가 40km 넘는 사드로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핵대결이 격화돼 오히려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사드 배치로 부지 조성, 매일비용,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추가 비용부담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로 얻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음을 밝히고 정부에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낮 12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에 위법성이 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국민주권의 침해를 초래했다”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실효적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의 사드 배치 결정 지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드배치지지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한

것”이라고 사드 배치 결정을 평가했다.

국민연대는 “사드배치는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사드배치 장소로 확정된 성주군민의 항의는 지역 이기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주군민 2000여명은 21일 서울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성주에선 지난 12일부터 군청 앞에서 사드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13일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를 건의,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뉴시스



도의회. 하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

전북도의회는 18일 하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간행물편집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종합적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게재할 자료의 확보와 원고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선출됐다. 위원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1), 산업경제위원회 강영우 의원(남원2),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양성민 의원(정수),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정주5)이 위촉됐다.

허남주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후반기에도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행물편집위원회는 분기마다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전북의소리’ 발간심의회 의정백서 및 기타 의회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을 심의하게 된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총선 백서 공개 ‘후폭풍’

지난 4·13 총선 참패 원인을 담은 새누리당 국민백서가 공개되면서 18일 당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비박계는 백서가 ‘뺑뺑’이라며 강력 비판하는 반면, 친박계는 백서가 나온 만큼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백서에 상향식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비중 있게 실리면서 김무성계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 반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전 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학용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총선 백서 발간을 계기로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김무성 대표”라며 “김 대표를 총선 패배 책임자로 지목하는 것은 더 이상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물론 당대표로서 선거패배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김 대표는 스스로 공천권을 내려놓고 국민공천제를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계 강석호 의원도 “내용이 많이 빠졌다”며 “윤상현 막판, 진박 강별, 대통령 존영 논란 등 일부러 덮으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내용이 많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병국, 주호영 등 비박계 당권 지지자들도 백서에 대해 “내용이 없다”며 혹평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백서 평가는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입장이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들이 지적한 대로 계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비박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백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닌,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파악해서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것이다. 당이 어려워진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새누리당 모든 구성원들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혁신과 화합의 다짐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서 자체가 당 발전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원계 함진규 의원도 “의원들 내부 간에는 계파 갈등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며 “공천 과정에서 여러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기에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백서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서정원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우현 의원은 “지금 누구 잘못을 따져서는 옳지 않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우린 트럼프를 반대한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지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7일(현지시간) 반도널드 트럼프 시위자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자들이 함께 행진하고 있다.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도의회 행자위, 자치행정국·인재육성재단·공보관실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행정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직역역량강화 및 진취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또 실국장 지역책임제 운영이 도의 입장 전달 역할보다는 시군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최근 문화관광재단 파견 공무원이 봉천에 바로 복귀해 인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수도 있다. 인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업무 특성에 맞는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은 “여성6급 리더과

정 교육생 선발에 있어 특정 지역에서만 선발되고 있는데, 이를 공문 시달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선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 대상자를 형성성 있게 선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 “주말농장 운영과 노무보통양 효도관광 같은 제도는 공무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선정과정 또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공유재산 관련 지방재정공시의 부서 자료 통계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맞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비슷한 재정력의 타 시도 공유재산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시와 현황 통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정호영 의원(김제)은 “공유재산 활용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재산은 빠르게 정리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항공대대 이전 문제 등 도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차원에서 운영되다 보니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남주 의원(비례)은 “인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노조에서 건의한 인사사건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사원칙 사전 공개, 소수직렬 배려 등 인사에 보다 공정성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광영 기자

김상곤, 더민주 당대표 선거 출마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다음달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18일 측근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이른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교육감은 그간 당 안팎에서 출마를 권유받았고 그간 고심을 거듭해왔는데 최근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더민주 당대표선거는 송영길·추미애 의원 양강구도에서 3자구도로 바뀌게 됐다. 김 전 교육감의 출마로 더민주 당대표선거 흥행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여야정, 추경에 ‘국채발행·SOC 배제’ 합의

민생문제·일자리 창출 초점... 누리과정예산은 반영 안돼

여야정은 1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성식 의장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조

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민생문제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지역균형을 고려하면서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중국의 서해안 불법 어로 방지 대책 예산과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김광림 의장은 이에 대해 “국채 발행을 신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이 1조원 내지는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 수출입은행 출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1조원 내외를 하게 되면 모두 6조원을 쓰게 된다”며 “나머지 4조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3당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자구노력 및 혁신노력을 더욱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의 재정 선도에 국책은행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상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개설준비 소홀’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1)은 18일 제335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개설을 앞두고 전라북도의 안일한 준비과정을 지적했다.

이상현 의원은 “개설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건물은 지어진지 36년 된 건물(1980년 준공)인데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단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 구조안전진단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2017년 1월 임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매년 부족해 사업물량 못 채우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번 북부지소 리모델링 비용 약 6억 원의 경우 예산확보조차 안되어 있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지난해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인력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북부지소는 고창, 부안, 정주, 완주, 김제 등 9개 시·군을 관리 운영하는데 고작 10명 인원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인력수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북부지소가 문제없이 개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그동안 순창지소 단 한 곳에서 도 전체 지방도 69개 노선, 2,149km와 교량 548개소, 터널 22개소를 관리해왔다. 관리구역이 넓다보니 도로훼손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고, 직인 1인당 도로관리연장이 무려 37.4km에 달해 업무과중이 극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산경위, 탄소융합기술원 현지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8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원들은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예타 통과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학수 위원장은 “전북 탄소산업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산업이면서 고강도·경량화라는 세계 산업의 추세에 부합된다. 특히 자동차·기계와 접목이 가능한 산업이기에 탄소제품의 상품화를 통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경태 의원은 “지난 5월 탄소법이 통과되면서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탄소산업 4대 전략기초 조성, 메가탄소밸리 조성사업 등 전북도의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탄소연구소로 개관해 2013년 5월 현재 명칭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다. 연구공간으로 소재성형동 등 15개동(39,754㎡) 49개 부층소재업체가 입주해 있다. /신광영 기자

조용천 ‘우병우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

조용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1,300억원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 진경준 검사장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수사내용을 통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진 검사장과 우 수석의 주요 경력을 보면, 법무부에서 그리고 대검에서 일정 부분 겹쳐서 근무했다”며 “부동산 매각과정과 보직경력에 대한 충분한 의문이 들 수 있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